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greenpeace.kr@greenpeace.org | 02-3144-1994

기후솔루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5층
solutions@forourclimate.org | 02-6013-0137

[공개서한] 새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보호를 촉구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귀중,

건강하고 울창한 숲은 국민의 노력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숲은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위로와 영감을 내어 온 우리 문화의 정서적 기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는 국내외 산림 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숲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2001년 이래 대한민국 면적의 41배가 넘는 4억 1100만 ha의 산림을 잃었습니다.¹ 우리나라도 도시화와 개발로 잔존하는 산림 면적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136,000 ha가 감소했습니다.² 서울시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넓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촉발된 기후위기는 온도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숲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한번 시작된 산불은 더 큰 규모로, 더 오래 지속되어 진화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타버린 나무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작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COP26)에서 산림 파괴 중단과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적 결속을 다졌습니다. 정부가 이미 약속한 국토의 30% 보호는 올해 열릴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총회(COP15)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5월 2일)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 부문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WFC)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WFC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정상들의 산림파괴 중단 약속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부는 WFC를 ‘산림 올림픽’이라 홍보하며, 산림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대내외 산림 정책은 오히려 산림보호가 아닌 산림파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¹ [Global Forest Watch](#).

²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가. 우리 국민은 그칠 줄 모르는 개발로 공공재인 자연의 총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단기적 안목의 국토 개발과 규제 완화로 후세에게 남겨줘야 할 도시 녹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숲도 어린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는다는 정책 방향에 위협받고 있으며, 법정보호구역도 난개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연 정책 부재의 대가는 국민에게 되돌아옵니다.

나. 기후변화를 막고자 만들어진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숲을 베어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확대를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세계 과학자 500여 명이 우리 정부에 알렸듯, 바이오매스 발전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재촉합니다.³ 특히, 강원, 경북 지역의 국가적인 산불 재난으로 이미 많은 숲을 잃은 상황에서 또다시 멸종한 나무를 베어 태우는 것은 국민 정서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정부 정책은 해외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느슨한 산림상품 교역제도와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의 부재는 동남아시아에서의 기준 미달 혹은 출처가 불분명한 목재 상품의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천연림을 파괴하고 선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자행한 기업에까지 용자를 지원해왔습니다.⁴

기후·환경단체의 연대체인 ‘기후·생태위기 대응 시민연대’는 지난 1월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후보 캠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⁵ 안타깝게도 시민사회는 귀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우려스러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가 실렸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과거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산림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달성과 글로벌 산림보전 리더십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을 기대하며,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3대 산림 정책 요구를 전달합니다.

1. 기후위기를 악화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에너지 축소를 요청합니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원료 생산지의 생태계를 파

³ 한겨레, 2021.12.23. [“과학자들 “바이오에너지, 화석연료 대체 못해” 공동 성명”](#).

⁴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2022.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 및 2021. [「착한 기름은 없다」](#)

⁵ 기후·생태위기 대응 시민연대, 2022. [「산림·생태 바이오에너지 제20대 대선 공동 정책 제안서」](#)

과하지만 풍력, 태양광과 같은 청정 재생에너지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정책적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후·환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바이오매스 난방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 정부도 대형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열대우림을 파괴해 만드는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의 퇴출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석탄과 섞어 태우는 바이오매스 혼소에 대한 REC 가중치는 즉각 철회하고, 강력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해 퇴출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2.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교역 제도 개혁과 공급망 실사법 도입을 요청합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한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느슨한 통관절차와 유명무실한 합법목재 교역제도로는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적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입된 바이오에너지 원료는 다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용됩니다. 새 정부는 선진국과 벌어지는 규제 격차에 따라 새로운 무역 장벽이 출현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련 무역 제도를 강화하고,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산림파괴 위험 상품을 다루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적·인권적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3. 국제 산림보호 약속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COP26의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비롯해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여러 약속과 국내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서는 모두베기와 어린나무 베기를 통한 산림파괴를 이어가고, 해외에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산림벌채 사업에 용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해외배출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제외하는 한편, 청정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2일
그린피스 · 기후솔루션